

종전 후 외세의 개입에 따른 영향과 갈등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본 제주4·3과 대만2·28의 遠因 -*

변현정**·고경아·허선주·송은경***·정창원****

- I. 머리말
- II.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야기한 제주4·3의 遠因
- III. 국민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만인의 갈등
- IV.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과 조선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외세의 개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의 집약체로서 제주4·3과 대만2·28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두 사건 모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백색테러라는 공통점과 양민학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카이로회담에서 조선은 신탁통치, 대만은 중화민국으로의 귀속이 결정되었다. 미군은 신탁통치 과정에서 일제의 체제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대중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된 남한에서는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치안을 맡았는데, 제주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농민, 노동자, 부녀자 등의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제주대학교 사학과

***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대학교 사학과, 제주대학교 사학과

**** 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cau16a@empal.com

만, 미군에게는 불만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3·1절을 맞아 제주에서는 가두시위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군정은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하여 좌익세력을 척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조치에 반발한 남로당은 1948년 4월 3일을 기해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 진압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귀속되면서 국민당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행정장관에 임명된 陳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대만에 대한 본격적인 통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陳儀로 대표되는 국민당정부의 대만통치는 대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만은 국민당정부의 전매제 실시와 중국대륙으로의 물자 매각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당시 대만인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적인 교육과 의료시스템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행된 황민화정책으로 일본문화에 대해 상당히 익숙해 있었고, 국민당정부의 지도층은 이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노력대신 대만인이 노예화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대만인들은 국민당정부의 관직독점과 부정부패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대만인은 점점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는 버리게 되었고, 대만인들은 스스로를 본성인(本省人)이라 칭하며, 외성인(外省人)들과의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충돌이 바로 2·28사건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패전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과 대만에 유입된 외세들이 현지인들과 빚어진 갈등에서 제주4·3과 대만2·28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주제어 : 전후처리, 외세, 제주4·3, 대만2·28

I. 머리말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8월 15일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한다. 제주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발전적 해소로 인해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치안을 유지했고, 이후 제주에 상륙한 미군정은 초기엔 인민위원회와 큰 충돌 없이 통치를 실시해 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통치체계를 유지하는 정책과 거둬들인 생활고로 인해 민심이 흔들리면서 차츰 인민위원회와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결국 미군정과 인민위원회는 3·1사건을 기점으로 대척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도민의 지지를 받는 인민위원회의 인사과

주도한 3·1 가두시위를 좌익의 선동으로 파악하고, 이후 제주를 ‘붉은 섬’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 제주 4·3이다.

한편 대만은 카이로선언으로 중화민국으로의 귀속이 결정되었고, 포츠담 선언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만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중국에 귀속되었고, 동년 10월 25일 국민정부는 陳儀를 대만성 행정장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장관공서를 설치했다. 대만에서의 정치체제는 중국대륙과는 달리 행정장관이 행정법규를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었으며, 특히 군사방면에서는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민정부가 파견한 관료들은 대만에서 정권을 확보하자 경제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대만노예화론을 앞세워 하루 빨리 대만인들의 의식형태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국민정부 측의 통치는 대만인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대만 2·28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와 대만은 중전 이후 미군정과 국민정부의 개입 하에 4·3과 2·28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4·3과 대만2·28에 대한 대다수 기존 연구 성과들은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는 주제에 비중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4·3과 대만2·28에 있어 가장 크게 부각된 공통점이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그 배경인 ‘외부세력’의 개입과 통치 권력의 변화가 민중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지역에 있어 외부세력(이하 외세)의 개입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제주4·3과 대만2·28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외세를 현지에서 자주적으로 구성된 세력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으로서 기존에 현지를 통치하던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았던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제주와 대만의 외세는 각각 미군정과 국민정부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 종식 이후 제주의 인민위원회와 대만의 총독부에서 외세로 통치 권력이 이양된 후 나타난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로 인한 갈등이 집약

1) 정형아·정창원, 「두 번째 중국화 : 전후초기 진의(陳儀)의 대만 ‘심리건설」, 『역사와 실학』 64, 역사실학회, 2017, 305-307쪽.

된 사건으로서의 제주4·3과 대만2·28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야기한 제주4·3의 遠因

미국은 카이로 회담 이후에 소련이 일본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루로서 한반도에서의 군정 실시를 갑작스럽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공백을 채우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와 친일 관료, 사법체계와 경찰을 유지하는 등, 일제의 체제를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²⁾

또한 도시 지역의 식량부족 현상과 이에 수반하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도 자유 시장 정책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비료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 하에서 농민들이 오히려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미국의 애초에 기대했던 목적과 달리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 사태가 심화되었다.³⁾

미군정은 방법을 바꾸어 1946년부터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였다. 미군정이 막을 내릴 때까지 지속된 미곡수집령은 미군정이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신한공사가 실시하였다. 문제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식량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구들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군정의 식량정책 변환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1946년 7월부터 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여타의 정치·경제적 화제보다 식량문제가 대두되었다. 아사 사건이 보고되면서는 세간에 루머 또한 돌기 시작했다. 이는 농민들 및 대중 사이에서 미군정에 대한 불만감을 고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⁴⁾

2) 박보영,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사회연구』 6-1,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72-73쪽.

3) 송보영, 『미군정기 식량 통제 정책과 농민 운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33-34쪽.

4) 송계경,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18-19쪽.

이 시기 제주에서는 해방 직후 도민의 정치·경제·문화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대체되고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자주통일 독립,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 일제 잔재세력과 파시스트 청산을 통한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노선으로 채택하였다.⁵⁾ 당시 인민위원회는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했던 인사들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 대체로 항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명망 있는 행정관료와 30대 초반의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⁶⁾ 아래의 표는 제주도내 읍·면별 인민위원회 지도부 명단이다.⁷⁾

〈표 1〉 제주도내 읍·면별 인민위원회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 지역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전체)	위원장	오대진	48	하모	단추제조업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부위원장	최남식	48	제주	교사	
	총무부장	김정로	39	제주	노동	조공 야체이카(1927)
	재정부장	김택수	45	제주	무직	위와 같음
	산업부장	김용해	45	하귀	무직	일본 전협 활동
	보안부장	김한정	50	가파	기자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선전부장	현호경	37	성산	단추공장업	일본 전협 활동
	조직부장	조몽구	38	성읍	무직	위와 같음
	보건후생부	좌창립	38	곽지	의사	
	제주읍	위원장	최남식	48	제주	교사
부위원장		강규찬	31	제주	노동	
애월면	위원장	김덕준	43	납읍	농업	사상서적 탐독
	부위원장	양근옥	45	동귀	하귀1구장	
한림면	위원장	고운선	38	한림	잡화상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부위원장	좌두영				
	서기국장	김행돈	30	한림		전협금속 오사카지부(1935)
	총무부장	김태안	36	한림	농업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문교부장	양관표	36	한림	농업	대관에서 노동운동
	산업부장	고종석				
선전부장	양병시	30	한림	잡화상	한림노동연구회(1934)	
치안부장	박성관					

5)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3-15쪽.
 6)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58-260쪽.
 7)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58쪽.

	부녀부장 농민부장	오매춘 박성선	53	금악	농업	
대정면	위원장 부위원장 행정부장 총무부장 선전부장 문교부장 치안부장	우영하 이신호 이신호 윤평석 이운방 문달진 윤성추	59 44 " 37 37 28	모슬포 모슬포 " 이도 하모 강정	대정면장 주류소매상 " 상업 농업 무직	재건야제이카 사건(1932) 위와같음 농업학교 맹휴사건(1931) 어린이날 시위사건(1929)
안덕면	위원장 부위원장	고근칠 이중환	55 53	감산 사계	면 서기 농업	
중문면	위원장	이봉옥	45	회수	농업	
서귀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도백 송태삼	37 35	가파 서귀	상업 농업	서귀면 독서회 사건(1935) 위와 같음
남원면	위원장	오동학	43	위미	농업	
표선면	위원장(1대) 위원장(2대) 부위원장	송건은 김민추 홍성흡	60 55 43	하귀 표선 표선	상업 농업 농업	
성산면	문서부장	한순화	32	고성		
구좌면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국장 총무부장	문도배 오문규 오화국 고기화	37 44 32 36	세화 하도 하도 하도	농업 농업 농업	재건야제이카 사건(1932) 위와 같음 농업학교 학생운동(1931)
조천면	위원장 부위원장	안세훈 조규창	53 33	조천 신촌	농업 농업	조천소비조합 사건(1939)

또한 9월 말부터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노동조합·학병동맹·소비조합 등의 대중단체가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이 단체들 중 특히 청년동맹과 부녀동맹의 경우 인민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인민위원회는 자주국가 건설과 같은 정책 노선의 진행을 위해 좌익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⁸⁾

인민위원회는 제주지방에서 여러 활동을 보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치안활동이었다.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치안대는 일본 경찰의 역할을 접수하였는데, 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것이었

8)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6쪽.

다. 한 예로 일본군이 식량 및 군수품을 수장하거나 소각하자, ‘일본군 물품은 인민의 소유’라는 주장 하에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수장 및 소각방지에 매진했다.⁹⁾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에 협력한 관료들이 도민에 의해 보복을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목적은 주로 혼란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지방은 사망자의 발생이 적었다.¹⁰⁾

또 다른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적산관리였다. 기존에 일본인에 의해 가동되던 작업장들을 해방 후 산업부와 협력하여 관리하였고, 군수품의 경우 일본군이 쓰던 물품을 접수하여 주민들에게 배분하기도 했다. 아래 내용은 안덕면 창천리에서 군수품에 대한 처분을 나타내는 결의문이다.

1. 일본군 재산은 우리의 재산이다. 누구든지 매매할 수 없다.
2. 금일 이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자에게 원가를 돌려주고 재산은 회수한다.
3. 금일 이후에 매매한 재산은 일본군이 철수한 후 몰수한다.

위의 결의문에 따라 창천의 인민위원회는 일본군 철수 후 남은 목재로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¹¹⁾ 또한 미군정이 일제 통치기구를 존속시키면서 부활한 면의 행정기능을 인민위원회에서 간여했다. 면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실시할 때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협의를 하였고, 일부 면에서는 인민위원장이 면장을 겸임하기도 했다.¹²⁾ 이렇게 인민위원회가 도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인사들이 인민위원회 성립 전부

- 9)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7쪽.
- 10)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8쪽.
- 11) 창천리 성청회, 『창천내』, 1987;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8-199쪽에서 재인용.
- 12)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9쪽.

터 도내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하단체들이 도내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한편 1945년 9월 28일,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해 항복접수팀과 무장해제팀이 상륙하면서 제주지역에서의 미군 주둔이 시작되었다. 9월 30일에는 제주도에 대한 풍문 확인, 행정 및 치안상태 점검, 지방법원사무 위촉을 위해 군정청 관리와 군정장교가 방문하였다. 뒤이어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제24군수지원사령부 전쟁포로과 소속의 선발대가 도착했다.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수효가 많았고 중무장 되어있는 제주도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미군에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군의 제주도 진주는 이처럼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제59군정중대와 보병 6사단 제20연대 제51야전포병대대 분견대가 제주도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11월 초에 본격적으로 파견되면서 군정업무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일제하에 사용했던 건물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붕괴된 일제통치기구를 재수립하였다. 또한 일제하에서 재직하던 관료를 그대로 존속하였다. E. Grant Meade는 이러한 미군정의 인사행위에 대해 “군정요원들은 초기에 이 지방 저 지방을 돌아다니며 현 재직자이면 누구든 군정의 이름으로 그의 관직을 승인해 주었다. 많은 시장과 경찰서장 및 기타 지방고관들이 그들의 자격이나 평판이 적절히 조사되지도 않은 채 임명되었다”고 지적했다.¹³⁾ 이는 본질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기구의 계승이었다.¹⁴⁾

이러한 미군정의 진주 이후 제주는 연이은 흉년과 어획고로 발생한 식량난을 겪었다. 이 사실은 다음의 <표 2>에서 확인된다.

13)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6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82쪽.

14)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4-27쪽.

〈표 2〉 1941-1946년간 제주도의 주요 식량생산 현황¹⁵⁾ (단위 : 석)

품종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평균 생산량	비율(%)
쌀	20,102	11,236	19,310	11,151	11,152	14,182	14,522	3.00
대맥	222,509	83,075	124,030	169,642	135,578	61,374	132,701	27.42
소맥	3,475	3,637	3,675	6,940	6,183	2,340	4,375	0.90
관맥	54,740	66,834	77,091	91,551	45,719	20,071	59,334	12.26
조	98,498	93,994	169,346	160,845	88,753	99,684	118,520	24.28
옥수수	43	32	65	93	61	17	51	
교맥	16,972	5,646	12,001	25,103	7,954	11,620	13,216	2.73
대두	14,388	6,007	11,380	19,893	7,889	10,392	11,658	2.40
소두	1,176	631	1,521	2,263	630	1,255	1,246	0.26
고구마	108,339	72,321	192,868	167,608	167,114	113,673	128,487	26.55
합계	540,242	343,413	611,287	604,089	471,033	334,608	484,110	100.00

위의 표에 나타나듯 제주의 토지는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전체 식량생산량 중 쌀의 재배는 3%에 불과했고, 1945년부터 이듬해까지는 총 수확이 평균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다. 어획량 또한 1945년 3백만kg에서 1947년 1백만kg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여기에 해방 후 귀환인구에 따른 인구증가와 모리배의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곡가가 폭등하였다.¹⁶⁾ 다음의 기사를 보자 :

불과 4·5일 간에 일약 배가의 폭등을 본 쌀값은 그렇지 않아도 생활면에서 생지옥의 도탄에 신음하는 일반 소비대중에 심각한 타격을 줘 기아를 앞에 한 인민의 비참한 아우성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보는 요즈음 ...¹⁷⁾

위 기사의 내용처럼 곡가 폭등으로 도민의 불만이 거세지자 미군정은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배급표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도정과 면에

15) 조선은행조사부편(1948), 『조선경제연보』, 地·4면, 진관훈,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0, 111쪽 재인용.

16) 진관훈,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0, 122쪽.

17)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자.

서는 배급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당시 유해진 도지사의 행정 하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1947년 11월 12일부터 1948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었던 감찰에 따른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배급표는 수급자가 아니라 면장실에서 보관한다. 이는 정치가들이 식량배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⁸⁾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식량배급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래 표는 1947년 11월의 제주도 식량 배급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1947년 11월의 제주도 식량 배급현황¹⁹⁾

읍면별	비농가(흡)		부분경작자(흡)		재산가(흡)	
	미국	잡곡	미국	잡곡	미국	잡곡
제주읍	1	-	-	-	-	-
중문면	1	1	0.7	0.8	0.5	0.5
남원면	1	1	0.8	0.7	0.5	0.5
서귀면	1	1	-	-	0.8	0.7
구좌면	1	1	-	-	-	-

위에 정리된 표에 의하면 기존의 식량배급량은 1일 1인당 미국과 잡곡 각각 1흡이었으나, 실제 분배 상황은 위의 표와 같이 적게 배급되었고, 11월 배급량이 12월 8일까지 전달되지 않기도 하는 등 배급시기 또한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⁰⁾

또한 미군정은 광복 직후부터 무역통제정책을 시행했다. 1946년 1월에 「대

18) Lawrence A. Nelson,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Cheju-do Political Situation>, 제주도연구회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226쪽 : “Ration cards are held in Myun Changs office instead of held by the rationee. This places direct control of food rationing in the hands of politicians.”

19) Peter J. Carroll, Administrative Assistant to Chee, Yong Eun, Director of National Food Administrator & Carroll V. Hill, Advisor, Subj: Operation of Rationing Program in Cheju Do, 3 January 1948;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26쪽에서 재인용.

20)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26쪽.

외무역규칙」을 공포하여 모든 대외거래관계를 미군정의 통제 하에 두었다. 남한지역과 타지역간 물자 및 재산 운수에 대해 군정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7월부터는 조선 이외 지역의 개인·정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특정물품의 거래, 무면허거래를 금지하고 금지된 거래에 대한 면허나 허가권 발급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외국무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미군정과 관계하는 사람들뿐이었고, 무역통제로 인한 물자 공급 제한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했다.²¹⁾ 특히 외부와의 무역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는 제주도의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다. 아래 자료는 밀수문제에 대한 미군정의 보고이다.

한국이 해방된 후 많은 밀수업자들은 본부를 제주도에 두고 있다. 그들은 의류나 화장품, 유리, 기타 용품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수한다. 상품은 부산이나 충청남도의 미확인 항구를 통해 한국 전역에 판매된다.²²⁾

“제6사단 보고에 따르면 1월 2일-17일 사이에 미 구축함 1척이 한국해역에서 불법으로 수하물을 선적한 소형 선박 5척을 억류했다. 억류된 물건은 쌀, 면화, 가솔린, 비단 등이 대부분이다. 이 선박들은 제주도나 목포로 가기 위한 것이다.”²³⁾

위 자료를 통해 제주가 중심지역이거나 혹은 중간기착지로서 타지역간의 밀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정에서 지속적으로 밀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한편에서는 해안경비대 대원들이 뇌물을 받고 밀수 행위를 눈감아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미곡수집령은 도민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

행정기관의 곡물수집 공무원 3명이 지난 주 안덕면 동광리에서 곡물수집에 반대해 항의하는 주민 약 50명에게 구타당했다.²⁴⁾

21) 송규진 「미군정기의 무역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교육』 118, 歷史教育研究會, 2011, 141-143쪽.

22)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320쪽.

23)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103쪽.

2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2쪽.

좌익인사들은 이달 들어 곡물수집에 반대하는 선동문구가 적힌 뼈라를 제주도 전역에 뿌리고 있다. 뼈라에는, “살인 경찰들에게 하루 5홉씩의 쌀이 분배되고, 악질적 테러리스트인 광복청년단(강력한 우익 무장집단)원들의 배만 살찌울 강제 곡물수집 정책을 거부하자”라고 적혀있었다...²⁵⁾

위 내용은 1947년 8월 16일의 곡물수집 공무원 구타사건과 8월 20일 선전문구 배포에 대한 미군정의 일일정보보고이다.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선전문구의 주 내용이 곡물수집이기 때문에 당시의 선전과 공무원 구타사건을 별개의 일로 볼 수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선전문구의 주된 내용이 곡물수집 정책이었다는 것은 당시 도민들에게 곡물수집 정책 관련 내용이 선전효과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군정의 곡물수집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군정은 곡물수집에 대한 소요를 좌익의 선동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존재한다.

한편 미군정이 제주에서 일어나는 소요들을 좌익세력의 선동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3·1사건 이후부터였다. 3·1사건이 일어났던 가두시위와 기념행사는 청년동맹의 後身인 민청 제주도위원회와 당시까지 표면화되지 않았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3·1절을 앞두고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준비위원회의 명의로 각 읍·면에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을 보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각 읍·면에서는 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 기타 각종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 3·1절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
- ② 24일까지 3·1운동의 원인·경과·의의·결과를 10월 인민항쟁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 ...
- ③ 25일로부터 28일까지 각 부락 및 직장대회를 소집하여 3·1시위운동에 전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
- ④ 당일에 지휘자 및 자위대는 반 및 직장별로 동원시켜 시위행렬로 부락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합할 것.

...

2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3쪽.

- ⑧ 이 양양된 인민의 기세를 살려 각 부락 및 직장에서 각종 형태의 대중집회를 가지고 농위·민청·婦同·노조, 기타 독서회·연구회·문화서클 등의 조직 강화를 도모할 것.
- ⑨ 당의 각급 기관에서는 3일 이내에 비판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할 것.²⁶⁾

남로당의 위와 같은 방침은 남로당이 3·1집회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세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명시해준다.²⁷⁾ 미군정은 남로당이 추진한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남로당은 시위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3·1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민들의 분노는 격화되었으나, 미군정과 경찰은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것에 주력하며 이날 초저녁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삼엄한 경계망을 펼쳤다. 뒤이어 대대적으로 체포작전을 전개해 3·1절 준비위원회 간부들을 검속하고 중등학생들을 잡아들였다.²⁸⁾

발포사건에 대한 미군정과 경찰의 대응을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화군중에 대한 발포는 과거의 역사에 유례가 없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볼 수 없었던 포학이요, 해방된 조선에 있어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여사한 현실을 일관할 때 허다한 모순당착이 내포하여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30만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냉정한 입장에서 고찰하고 선량한 인민과 더불어 그 진두에서 용감히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한다.

- ① 민주경찰 완전확립을 위하여 무장과 고문을 즉시 폐지할 것
- ② 발포책임자 및 발포경관은 즉시 처벌할 것
- ③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인책 사임할 것.
- ④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할 것
- ⑤ 3·1사건에 관련한 애국적 인사를 검속치 말 것
- ⑥ 일본경찰의 유업적 계승활동을 소탕할 것²⁹⁾

26) 김용혜의 판결문;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69쪽.

27)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69쪽.

28)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3-44쪽.

또한 위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미군정의 명령에 불복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으며,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3·10 총파업’도 단행하였다. 제주도내 직장의 95%이상이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여 총파업에 동참하였는데, 조직적으로 파업을 전개하면서 강력한 투쟁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에 미군정과 경찰은 일시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총파업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며 다시 무차별적으로 총파업을 분쇄하기 시작했다. 이 사후처리는 당시 경찰 총수였던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맡겨졌다. 그는 제주도 도착 즉시 제주 도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3·1절에 발생한 불상사에 접중(接踵)하여 정치 산업 및 교육 각 기관의 활동이 마비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본관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왔다. 첫째 제주도의 동포제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비상 만전대책을 가지고 왔다. … 바라건대 동포제위는 안심하기를, 그리고 경찰과 협력하여 제주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를, 폭동과 같은 무질서의 행동같이 조선건국의 전도를 위협케 하는 것은 없다. 폭동의 빈발은 조선민족의 정치적 자치력과 도덕적 자율성이 결여함을 세계의 이목 앞에 폭로시켜 우리의 위신과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동포여, 반성 자중하여 일상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³⁰⁾

이 포고문에서는 3·1절 사건을 하나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만전대책에는 타 지방의 경찰들을 대거 투입하여 물리력으로 제주 치안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실제로 발표 다음날 전남, 전북 경찰청에서 2백여 명이 급파되는 등 응원경찰이 속속 증원 되었다.³¹⁾

미군정은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이 파견하고,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투쟁위원회 간부 등 500명을 검속하였다.³²⁾

… 총파업의 이유는 다양각색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3월 1일 폭동 당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 것 같다. 이 증오심은 남로당의 선동으로 고무되

29)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자.

30) 『濟州新報』, 1947년 3월 16일자.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21쪽.

32) 강근형 외 9명,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212쪽.

어 왔다.³³⁾

… 시위와 파업, 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불법 시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에 정치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추정된다.³⁴⁾

위 인용문의 출처는 3·10 총파업 이후의 미군정 보고서이다. 자료에서 나타나듯 미군정과 경찰은 총파업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은 무시한 채 ‘남로당의 선동 조작’으로 간주했고, 민심 수습보다는 좌익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미 그들은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³⁵⁾

미군정이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한 이유는 대규모로 일어난 3·1시위를 주도한 주체가 인민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던 남로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시위의 계획부터 남로당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며, 인민위원회와 남로당 사이에 일정 정도 수준의 연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시위의 규모가 컸던 것과 시위에 대한 남로당 및 인민위원회의 영향력, 도민의 호응만을 가지고 제주도 전체를 ‘붉은 섬’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1사건 이후 남로당이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발표한 결의안은 미군정의 통치 하에서 불만이 쌓인 채 사건을 경험한 민중이 정치성향을 차치하고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좌익 척결정책으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결심하였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과 주변 오름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며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³⁶⁾ 350명의 무장대가 이날 새벽을 기해 도내 경찰 24개의 지서 중 12개의 지서를 공격했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사무소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다.³⁷⁾ 이로 인해 경찰 4명, 민간인 8

3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6쪽.

3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7쪽.

3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22쪽.

36) 강근형 외 9명,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214쪽.

명, 무장대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이 행동을 개시하며 뿌린 호소문에 담긴 주장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둘째는 단독선거·단독정부의 결사반대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미군정에 대한 저항을 표명하고 있다.³⁷⁾ 미군정은 이에 대해 군정장관 명의로 경비대의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2. 4월 18일 도착한 두 대의 L-5 연락기는 귀관의 지휘 하에 있다.
- 3. 한국 국방경비대 1개 대대가 추가로 4월 20일 오전 중에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 즉시 이 대대도 현재의 다른 한국 경비대와 같이 귀관의 작전통제 하에 놓일 것이다.
- 4. 귀관은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귀관의 수중에 있는 군부대를 이용하라.
- 5. 대규모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귀관은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라. ...³⁹⁾

이 명령은 미 군정장관 William Frishe Dean 소장이 제59군정중대 군정장관인 John Sugar Mansfield 중령에게 보낸 ‘제주도 작전’의 일부이다. 진압작전에 앞서 무장대에게 항복을 권유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 김익렬 제9연대장이 무장대와 접촉하였다.⁴⁰⁾

... 작전계획은 ①제9연대가 진압책임을 지고 ②사건발생 당시 폭도들은 경비대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67쪽.

3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67쪽.

39) 주한 미군정 사령부, 「제주도 작전」, 1948년 4월 18일. 수산: 제59군정중대, 민정관(Chief Civil Affairs Officer);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3』,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25-26쪽.

40) 김창후,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자료」, 『4·3과 역사』 2, 제주4·3연구소, 2002, 73-74쪽.

를 적으로 삼는 것을 회피하였으므로 경비대가 중간에서 쌍방을 격리하고 ...41)

도외에서 온 경찰대의 무차별 사살은 상호간 너무나 엄청난 살생이 생겼을뿐더러 무력으로써는 도저히 동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경비대의 근본방침은 사살보다는 선무에 주력을 두었다. ...42)

9연대 연대장 김익렬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대표와 회담 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중이니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國警)의 산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 구국항쟁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을 특히 인민과 국경을 이간시키려는 경찰의 모략 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김 연대장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음.43)

위의 자료는 경비대와 무장대 간 협상에서 보인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의 입장이다. 김익렬 중령은 강경진압보다는 선무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였고, 경비대가 도외에서 온 경찰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해결방안 중 하나로 삼았다. 무장대는 협상을 통해 경비대가 계속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고 김익렬을 통해 경비대의 작전을 억제하고자 하였다.44)

이처럼 경비대와 무장대는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미군정의 반대와 우익단체들의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무장대는 남한 단독선거에 대한 거부투쟁을 전개하였고,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제주도의 선거구만이 무효처리가 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파견하며 강경진압을 전개하였고, 5월 26일에 딘 군정장관이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포고 발표를 하였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고,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연대장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혼란 속에

4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286쪽.

42)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자.

43)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헌진 4·3의 진상: 소위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 대림인쇄사, 1995, 78쪽.

44) 김용철,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21쪽.

서 1948년 8월에 결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당시 정부는 제주 지역의 봉기에 대해 정치적 요구의 표출이 아닌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11월에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Ⅲ. 국민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만인의 갈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은 식민지 해방을 선전했다. 이에 대만 내에서는 대만인들이 대만 정치에서 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 한걸음 더 나아가면 ‘自治’에 대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新竹州會議員이었던 자산가 黃維生을 비롯한 그 친족과 친구 등 수명의 협회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산을 보전하는 최선의 방법이 대만 독립이라 인식하였다. 따라서 당시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 정부의 허용과 승인 하에 전개한다면 대만 독립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인식하여 소재지방행정청에 독립청원을 제출하는 등, 대만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으로는 국민당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대만독립의 언사를 전개하거나, 심지어 몇몇은 대만이 계속 일본의 조계지 신분으로 남아있을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 한 예로 臺中市의 楊貴(楊逵)는 중경정부에 대해 방자하고 횡폭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현재 먼저 행동에 확고한 사상적 기초를 갖추면 장래에 비로소 중경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표현했다.⁴⁵⁾

1943년 카이로선언 이후 국민당을 이끌던 蔣介石은 일찍이 대만을 접수할 준비에 착수했다.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할 방법을 구상하던 과정에서 당시 대만 조사위원회 주임의원이었다던 陳儀는 대만이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특수한 체제를 지녀야 하며 국유공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臺灣接管計劃綱要」가 설치되었고, 이는 蔣介石의 기준을 거쳐 최고 지도강령이 되었다.⁴⁶⁾

45)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13期, 國史館, 2007, 49-50쪽.

1945년, 대만은 중국정부의 수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 대만에서는 곧바로 권위적인 통치가 시행되었다. 일본이 투항한 후, 국민정부는 곧 陳儀를 「대만성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 당시의 행정장관은 행정권을 이외에도 대만 경비 총사령관을 겸임하며 군사권을 확보했고, 山西省 太原市 지방 자치법규 제정권까지 관할하는 상당히 큰 권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⁴⁷⁾

당시, 대만 민중은 해방군인 국민정부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일본 항복 이후 국민당 군대가 대만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여 일의 정치적 공백기 동안 지방 지도자들과 지식인, 청년 등은 자발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간단체를 조직했다. 「삼민주의청년단」은 곳곳에서 지부를 창설했으며, 항일운동을 했던 陳炳, 林獻堂, 葉榮鐘 등은 「국민정부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민정부를 기다렸다.⁴⁸⁾

하지만 국민정부가 상륙한 후, 주요 공직은 陳儀의 측근으로만 구성되었고, 대만인과의 협의에 의한 통치는 묵살되었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대만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만 내부에서는 국민당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갔다. 1946년 당시 대만 행정부 내 부처장급 이상 관리 21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중국대륙 출신들로 채워졌다.⁴⁹⁾ 게다가 종전 직전에 ‘모의대만독립안’을 주도한 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대만인의 독립에 대한 자발적 움직임을 견제하고 통제했다. 아래 사료는 『警備總司令部週年工作概況報告書』에 나타난 판결문의 일부이다.

辜振甫·許丙·林熊祥·簡朗山·徐坤泉 등 다섯 사람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는 전후에 대만군참모부가 적의 공격을 받도록 교사해 대만독립을 모의했다. … 辜振甫는 … 대만독립을 모의하고,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⁵⁰⁾

46) 김정화, 「2·28 대만 민주항쟁과 연구현황」, 『人文學志』 35,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07, 79쪽.
 47) 黃秀端, 「政治權力與集體記憶的競逐—從報紙之報導來看對二二八的詮釋」, 『臺灣民主季刊』 5卷4期, 財團法人臺灣民主基金會, 2008, 104쪽.
 48) 지은주·董思齋,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235-236쪽.
 49) 신상진, 「대만의 민주화 : 과정과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23권, 한국동북아학회, 2002, 157쪽.

경제 또한 국민당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광복 후 모든 일제의 재산, 즉 대만은행, 석유, 알루미늄, 전력, 제당, 비료를 포함한 관민영이나 독점산업은 국민당 정부가 접수하여 국가의 독점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이 산업들을 대만 본토에 있는 애국적 상공업계에 맡기지 않았다.⁵¹⁾ 또한 전매제를 실시하여 경제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아래 표는 해방 이후 대북시 공무원 생활필수품 가격표이다.⁵²⁾

〈표 4〉 대북시 공무원 생활필수품 가격표 (단위 : 元)

	쌀	밀가루	설탕	방직	땃감
1945년 8월	43.73	5.83	5.42	17.00	0.15
9월	33.13	6.67	1.67	38.00	0.15
10월	44.26	6.67	1.25	38.00	0.31
11월	42.00	7.50	1.25	39.37	0.19
12월	59.23	12.10	1.62	42.00	0.22
1946년 1월	88.40	11.11	2.70	42.00	0.34
2월	171.40	10.08	6.21	50.01	0.37
3월	235.85	11.39	9.72	50.00	0.35
4월	218.63	13.75	10.14	50.00	0.38
5월	284.59	17.57	13.30	55.00	0.38
6월	189.92	20.00	19.44	55.00	0.39
7월	184.18	21.67	33.06	55.00	0.44
8월	207.59	22.78	35.83	82.50	0.55
9월	164.30	21.94	31.94	82.50	0.55
10월	193.45	21.11	31.67	120.00	0.50
11월	191.69	22.78	28.33	164.00	0.55
12월	229.23	24.17	28.89	164.00	0.62
1947년 1월	256.17	34.17	32.78	184.00	0.72
2월	393.08	53.33	54.44	184.00	1.00

50) 『警備總司令部週年工作概況報告書』, 臺北 : 警備總司令部, 1946, 94쪽 ;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13期, 國史館, 2007, 50쪽에서 재인용.
 51) 藍博洲, 「대만 - 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 42, 역사문제연구소, 1998, 54쪽.
 52)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13期, 國史館, 2007, 68쪽.

3월	613.92	68.06	65.28	184.00	1.17
4월	666.92	65.28	66.67	184.00	1.17

<표 4>는 1945년 8월부터 1947년 4월까지 생활필수품의 가격변동을 달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각 품목의 가격이 1945년 4분기를 기점으로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정부가 대만을 발전시키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끊임없이 대만이 보유한 쌀, 석탄, 설탕 등 물자를 대륙으로 운송해 매각하는 등 이전 일본제국과 다른없는 식민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행정장관공서는 미량부족의 잠재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관제조치와 배급제도를 폐지했으며, 대만의 미곡을 대량으로 대륙에 운송해 판매했다.

이와 같은 생활필수물자 배급기강의 혼란과 폐지 그리고 경찰력의 부재로 인해 물가 특히 식량은 비록 공시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암시장가격이 출현했고 끊임없이 급증했다.⁵³⁾ 일본이 점령했던 시기 총독부의 물가 안정화조치와 사회질서유지 측면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10월 25일 이후 대만 행정장관공서의 통치 시기에는 물가폭등으로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 또한 심화되었던 것이다.⁵⁴⁾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대만은 문화적으로도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약 50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은 대만은 언어·문화 등 제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은 깊숙하게 스며들었다. 일본 식민정부는 1896년 국어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고, 1898년에는 공학교를 설립하여 대만인의 소학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이어 1919년과 1922년 두 차례 ‘대만교육령’을 반포하면서 동화정책을 방침으로 삼아 공학교,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대만교육체제를 수립했다.⁵⁵⁾ 당시 국어운동의 최종 목표는 모든 대만인으로 하여금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국어운동의 추진 결과, 일본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통

53)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13期, 國史館, 2007, 69쪽.
 54) 정형아,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耽羅文化』 4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4, 159쪽.
 55) 김하림·鄭鴻生,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중국근현대사연구』 5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1, 61쪽.

계에 의하면 1940년, 대만의 ‘일본어 해독자’는 전 인구의 51%에 달했다.⁵⁶⁾ 대만인은 식민통치시기 근대적 교육으로 갖추게 된 준법정신과 더불어 이전 청조 통치기에 비해 발달된 의료체계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황민화정책으로 일본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있었고, 일본어 사용이 능숙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일본과의 전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국민당은 일본화된 대만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고, 오랜 기간 일본과 전쟁을 치르던 외성인들은 일본을 적대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만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노예화론’을 앞세웠다.

대만 행정장관공서는 ‘대만노예화론’에 따라 일본어에 능숙하고 일본의 식민지통치체제 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대만인들을 “중국어에 서툴러 능숙하게 공문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인재가 결핍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임용에서 배제시켰다. 陳儀는 수차례 대중을 시찰하며 “조국의 언어, 법률과 역사를 빠르게 학습해야 비로소 한 명의 좋은 국민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대만의 중국화를 호소했다.⁵⁷⁾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인들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조국으로 귀환하고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점점 버리게 되었다. 국민당정부는 일본의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만인을 배척하였고, 대륙출신 인사들의 직위 독점과 더불어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통제정책을 통해 각종 물품의 전매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인과의 이익 경쟁을 불러들여 민중의 원망과 생계곤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대만 2·28이다.

대만 2·28은 1947년 발생한 반정부 항쟁사건이자 양민학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은 1947년 2월 27일, 타이베이 延平北路에서 사제담배 판매자인 林江邁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발하였다. 조사관들은 차마 피하지 못한 林江邁의 사제담배와 현금을 모두 몰수하였고 이 과정에는 그

56) 周婉窈,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2003, 175쪽.

57) 陳翠蓮, 「去殖民與殖民的對抗: 以一九四六年 臺人奴化論戰爲焦點」, 『臺灣史研究』 9, 2002, 154쪽.

너는 조사관들에게 애원하였다. 조사관들의 과잉진압을 목격한 시민들은 분개하여 조사관들에게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조사관이 시민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이 연출되자 결국 총을 발포하였고, 구경하던 학생인 陳文溪가 그 총에 맞아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다.

2월 28일 발포자를 처벌하라는 등 항의를 하던 시민들에게 국민당 정부가 충격을 가하면서 이는 전국적인 항의사태로 번졌다.⁵⁸⁾ 흥분한 시위대는 외성인(外省人)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구타하고 그들의 소지품을 방화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시위대는 방송국을 점령하여 “대만은 전쟁 후 불량정치로 인해 탐관오리가 횡행하고, 쌀을 외부로 반출하여 민생고가 심해졌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지의 탐관오리를 쫓아내고 유혈진압 생존을 도모하자.”⁵⁹⁾는 주장을 방송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와 전면전을 펼쳤다. 2월 28일 일어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시위는 당시 유혈진압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국민당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갔다. 결국, 국민당이 대만사회와 대만인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한 채 강압적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과욕이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이라는 대만 사회의 아픈 분열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사건이 발발했을 때, 행정공서의 장관인 陳儀는 蔣介石에게 “본성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외성인을 해친다.”라는 보고를 올렸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정부패, 사회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생략된 채 폭동으로 단정 지어졌다. 사건이 거세지자 대만의 각 지역에서는 처리위원회가 생겨났다. 각 지역의 신사계층이 참여한 처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수습에 착수하게 된다. 陳儀는 처리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⁶⁰⁾

대만에 군대가 파견될 것이 확정되자 陳儀의 태도는 돌변했다. 중앙에서 대만으로 군대가 진입하자 陳儀는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였고, 호구를 조사하

58) 김혜련, 「2·28학살사건부터 천수이볜 총격사건까지」-본성인-외성인 갈등의 역사와 대만사회의 비밀,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04, 92쪽.

59) 김정화, 「2·28 대만 민주항쟁과 연구현황」, 『人文學志』 35,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86-87쪽.

60) 허영섭, 『대만, 어디에 있는가』, 채륜, 2011, 299쪽.

여 관련자는 물론 의심되는 자까지 모두 잡아들였다. 이후 蔣介石은 감찰사 楊亮功을 보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차후 대만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보복성 폭력과 “폭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겠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관에서는 국민당군을 투입함과 동시에 무자비한 살육으로 인해 대략 2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

대만 2·28은 국민당이 대만에서 정권을 장악한 지 1년 만에 발생하였다. 국민당의 무능과 강압적 통치방식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였다. 국민당은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고, 그 결과 대만인들은 蔣介石과 국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외성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게 하였다.

대만 2·28 이후 국민정부는 장관공서체제의 개혁과 조정을 진행한다. “장관공서를 省政府로 고치고, 省主席이 경비사령관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며, 省 정부 위원과 각 廳處長은 될수록 대만인을 임용하도록 하고, 縣長이나 市長은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정부기관 중 대만인과 타성인을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민생공업 중의 公營범위를 될수록 감소시키며, 현행 행정정책에 중앙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⁶¹⁾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인출신의 魏道明을 省主席으로 임명하였다.

사건발생 후 2년 후인 1949년 5월 20일, 국민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후 12월, 국공내전에서 패한 蔣介石은 50만 명의 국민당군을 이끌고 대만으로 入島한다. 대만은 중화민국의 이름아래 국가체제를 갖추었고, 계엄령은 1987년까지 대략 40년 동안 이어졌다.

상술한 내용으로 볼 때, 대만 2·28이 국민당의 강압적인 진압에 의해 발발하였다는 점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국민당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깊이 내제되어 있다. 당초 국민당이 입도했을 때 대만인은 그들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국민당의 모순된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들을 외성인(外省人)으로 규정하며 그들과 다른 족군(族群)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인의 민족의식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한족(漢族)이라는 결속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만의 독특한 족군(族群) 관계, 그리고 여러 열강의 지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

61) 김정화, 「2·28 臺灣民衆抗爭과 臺灣意識」, 『사립』 29권, 수선사학회, 2006, 220쪽.

로 한족(漢族), 내지는 중국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한국인과는 차별성을 지닐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해방이후 대만은 같은 한족(漢族) 출신에게 장악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동족이 아닌 외세로 간주된 외래인(外來人)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IV. 맺음말

이처럼 제주와 대만은 종전 후 미군정과 국민정부가 통치를 담당하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제주의 경우 미군정이 통치 초기부터 식량난과 무역 문제, 일제의 잔재를 해결하는데 과오를 범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의 불만을 야기했고 인민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 3·1사건은 도민의 불만과 인민위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분출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후에 빚발친 소요사건의 원인에 대해 미군정은 좌익의 선동으로만 간주했다.

한편 대만의 경우는 일본의 임시관리 기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사회경제적 양상이 국민정부 접수 후 빠르게 붕괴되었다. 대만인들의 기대와 달리 국민정부는 대만의 물자를 대륙으로 유출해 대만 내의 경제를 곤경에 빠트렸다. 또한 대만노예화론을 내세워 대만인들을 정치에서 배제시켰고, 부정부패를 행하면서 대만인의 반감을 조장했다. 이러한 국민정부 측의 차별정책은 당시 대만인과 외성인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대만 2·28이 일어났다.

제주 4·3과 대만2·28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도 있겠다. 두 지역 모두 전후처리과정에서 ‘외세’라고 규정할 수 있는 미군정과 국민정부가 유입되었다. 이들은 현지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갈등을 유발하였다. 미군정은 제주의 상황을 좌익세력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하였으며, 국민당이 파견한 대만의 통치권력은 대만 2·28을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이라 보고하며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즉, 제주와 대만 모두 자국민들의 의지외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부를 구성함과 아울러 식민시기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중의 불만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측면

을 이유로 한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도외(島外)에서 들어온 세력들과 현지인 사이의 모든 갈등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제주 4·3과 대만 2·28이었다.

상술한 내용에 기반할 시, 제주도에서의 외래인은 미군정이며, 대만에서의 외래인은 국민당이다. 물론 제주의 경우 미군정이 외래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국민당은 대다수의 대만인과 같은 한족이자 전후 국민당의 유입을 환영한 대만의 경우에는 국민당을 외래인이라 칭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대만의 경우에는 먼저 대만의 독특한 족군(族群)관계를 봐야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2·28을 기준으로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으로 나뉘었으며, 본성인(本省人)은 다시 객가인(客家人 : 漢族), 민난인(閩南人 : 漢族), 원주민(原住民)으로 나뉜다. 한족(漢族)의 경우에는 대만이 서양열강과 정씨(鄭氏) 집안, 청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량 유입되었다. 하지만 청을 제외한 서양열강, 정씨집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의 대만은 중국 본토와는 다른 국가로 인식되었고 분류되었다.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탐라시대를 제외한 고려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동안 이미 한반도내 부속도서로서 인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주민을 제외한 대만인들은 한족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인식은 낮다는 추측이 가능하나, 제주인은 한반도내 구성원, 즉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대만인은 한족이라는 유대감이 있지만 중국과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은 낮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겠으며, 이는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대만 2·28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당과 함께 유입된 한족들은 대만인 입장에서 보면 외래인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폭력이라는 성격을 지닌 제주 4·3과 대만 2·28은 연구에 있어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연관시켜 연구하는 글이 많아지고 있고, 연구뿐만 아니라 제주 4·3 피해 유족들과 대만 2·28 피해 유족들과의 교류도 또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두 사건을 연관시키는 이유를 단지 국가폭력적인 측면으로 단정시키는 느낌이 강하다.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 4·3과 대만 2·28에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욱이 당시 동아시아 정세 내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이라는 기존의 공통점이 아닌, 외세의 개입과 그들이 시행하였던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이라는 배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외세의 통치가 제주와 대만에 끼친 영향과 그 결과로서 제주 4·3과 대만 2·28을 탐색해 보았다. 두 사건의 연구교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두 사건을 모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떠나질 않는다. 따라서 필자들은 오히려 외세의 개입,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외세의 모순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현지인들의 분노를 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제주 4·3과 대만 2·28이라 파악했다.

참 고 문 헌

1. 신문 및 자료집

『국제신문』

『濟州新報』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
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
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주한미군사령부, 『제주도 작전』, 194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Cheju-do Political Situation>

2. 논문 및 저서

강근형 외 9명,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
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김용철,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김정화, 「2·28 臺灣民衆抗爭과 臺灣意識」, 『사림』 29권, 수선사학회, 2006.

김정화, 「2·28 대만 민주항쟁과 연구현황」, 『人文學志』 35,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07.

김창후,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자료」, 『4·3과 역사』 2, 제주4·3연구소, 2002.

김창후, 「『넬슨 특별감찰보고서 ; 제주도의 정치상황』 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김창후, 「『넬슨 특별감사보고서 ; 제주도의 정치 상황』 해제」, 『제주도연구』 17, 제주
학회, 2000.

김하림, 鄭鴻生,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중국근현대사연구』
5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1.

- 김혜련, 「[2·28학살사건부터 천수이벤 총격사건까지] - 본성인 - 외성인 갈등의 역사와 대만사회의 비밀」, 『인물과사상』 75호, 인물과사상사, 2004.
- 藍博洲, 「대만 - 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 42, 역사문제연구원, 1998.
- 문창송 編,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소위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 대림인쇄사, 1995.
- 박보영,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사회연구』 6-1,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 송규진, 「미군정기의 무역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교육』 118, 歷史教育研究會, 2011.
- 송보영, 『미군정기 식량 통제 정책과 농민 운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송재경,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신상진, 「대만의 민주화 : 과정과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23권, 한국동북아학회, 2002.
-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형아,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耽羅文化』 4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4.
- 정형아·정창원, 「두 번째 중국화 : 전후초기 진의(陳儀)의 대만 ‘심리건설」, 『역사와 실학』 64, 역사실학회, 2017.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 주완요 지음, 손준식·신미정 옮김,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2003.
- 지은주·董思齊,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 진관훈, 「해방 후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허영섭, 『대만, 어디에 있는가』, 채륜, 2011.
-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13期, 國史館, 2007.
- 陳翠蓮, 「去殖民與殖民的對抗: 以一九四六年 臺人奴化論戰爲焦點」, 『臺灣史研究』 9卷 2期, 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2002.

黃秀端,「政治權力與集體記憶的競逐—從報紙之報導來看對二二八的詮釋」,『臺灣民主季刊』5卷4期,財團法人臺灣民主基金會,2008.

Abstract

Impact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Foreign Powers After the War

- Indirect Causes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Taiwan February 28 Inc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economic Factors -

Byeon, Hyeon-Jeong·Go, Gyeon-Ga-Hur, Sun-Ju-Song,
Eun-Gyeong-Jung, Chang-Won

This study focused on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Taiwan February 28 Incident as the result of the intervention of foreign powers and all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handling postwar issues in Taiwan and Joseon that were Japanese colonies. Both the two incidents were the white terrors committed by the governments and innocent people were massacred. At the Cairo Conference, it was agreed to establish a trusteeship in Joseon and to return Taiwan to the Republic of China. Under the trusteeship, the United States utilized the system of the Japanese Empire, and made people's life even harder.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rule, many activities of the People's Committee were observed. In particular, the People's Committee was in charge of public security in each region, and Jeju was no exception. The committee had a broad base of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farmers, workers and women, but it must have been an eyesore to the U.S. military. In the meantime, a street demonstration was staged in Jeju to celebrate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U.S. military

rule took this opportunity and decided to eradicate leftists, recognizing Jeju as the 'Red Island.' The South Korean Workers' Party rose up in arms against the action of the U.S. military rule on April 3, 1948, and innocent people were indiscriminately killed in the course of suppression.

As Taiwan was returned to the Republic of China, the Kuomintang of China came to power. Chen Yi (陳儀),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Administration, wielded absolute power and started to rule Taiwan in earnest. The Kuomintang's rule over Taiwan, led by Chen Yi, moved in a wrong direction without understanding the circumstances of Taiwan. Taiwan experienced serious infl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monopoly system by the Kuomintang government and the disposal of goods to Mainland China. Back then, Taiwanese people experienced modern education and medical systems in the era of Japanese Colonialism. In particular, the Japanization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made Taiwanese people familiar to Japanese culture in the process. The leadership of the Kuomintang government thought Taiwanese people were enslaved by Japa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situations. On the contrary, Taiwanese people started to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monopoly of public posts and corruption of the Kuomintang government. They gradually came to abandon their expectations for going back to their homeland, and called themselves benshengrens (本省人, meaning people of this province), keeping their distance from waishengrens (外省人, meaning people of non-Taiwan provinces). A clash that occurred against this backdrop was the February 28 Incident. In other words, foreign powers that flew into Joseon and Taiwan due to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after Japan's defeat came into conflicts with natives, resulting in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Taiwan February 28 Incident.

Key words : handling postwar issues, foreign power, Jeju April 3 Incident, Taiwan February 28

Incident

교신 : 정창원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E-mail: caul6a@empal.com)

논문투고일: 2018. 07. 20

심사완료일: 2018. 10. 11

게재확정일: 2018. 10. 13